

#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5556
----------	------

제출연월일 : 2019.10.2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1. 폐지이유

가.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1. 12월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으며, 대구시 예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 행정부시장)’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고, 위원회의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각 개별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결과에 기속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나. 그러나, 본 조례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위원회로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집행부 의사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듯이 본 조례 또한 법령의 위반여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함.

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前) 안전을 부결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권한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가결하더라도 이 후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무의미 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라. 아울러,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들(도시계획위원회, 평가심의위원회 등)이 있어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또 다른 규제가 발생되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대구시 사업 예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 행정부시장)’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기속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불임

- 「지방자치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20. ~ 10. 9.

(나) 예고결과 : 의견접수 1건 [불임 2]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불임1]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 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 현 행 조 례

### □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사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사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의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같은 조 제7호와 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예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입지선정
  2. 주요 국책사업으로 정부기관에서 입지선정을 시에 위임하는 사업의 입지선정
  3. 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의 입지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입지선정
-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다만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2. 도시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가목 중 도로,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다목의 유통·공급시설, 마목의 방재시설, 사목의 환경기초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보안유지, 긴급사안, 심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되, 이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재창조국장, 교통국장이 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도시경제, 교통, 건축, 조경, 토목, 환경, 방재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제1호의 전문가 이외에 해당사업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
4. 중앙 및 지역언론사의 차장급 이상의 언론인 및 변호사
5.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6. 관계기관의 공무원 중 사무관 및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상인 자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 1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나머지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당연직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 이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의 제2호에 따른 입지의 선정은 해당 법령 혹은 해당 기관의 지침 및 방침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1. 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2. 기반시설 : 해당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신청

④ 위원장은 시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시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각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결과의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를 위한 입지평가의 방법, 의견청취, 선정과정 및 결과 발표 등 입지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사업을 시행하는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조사·연구의 요청) ① 위원회는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의한 조사 또는 연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시행 이전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을 하였거나, 각 건축법 등의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붙임 1]

#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폐지조례안으로 조례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없음에 따라 미첨부 제1호 사유에 해당함.

##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 태 익

## [붙임 2]

##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내 용	조치결과
대구환경운동 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조례 위반 사항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li> <li>○ 본 조례를 전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일부 개정을 통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례의 입지선정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li> <li>·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집행부 의사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판시</li> <li>· 조례 개정에 의해서는 위법성을 치유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li> </ul> </li> </ul>